

A2 ■ 한국일보

12/15/01

종합

# 위안부소송 관심 절실

미국에서 진행중인 징용 및 위안부 소송에 대한 한인사회 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위싱턴 연방지법에서聆소에 들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던 LA거주 정재원씨(79)씨가 일본의 다이하이오(구 오노다)사들 상대로 한 소송 등 2건 이상이 진행된다.

이중 정재 케이스는 피고측의 기각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위안부 집단소송 등은 심의과정에서 기각당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미정부 외면 심의과정서 기각  
한국정부 소극적 자세도 문제  
커뮤니티차원 서명운동등 시급**

2차대전중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음분의 보상을 받아내려는 이같은 소송들이 잇달아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숨기려는 일족의 비윤리적 자세와 함께 과거 나치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제기한 배상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미행정부가 정치·외교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일본관련 소송에서는 절제하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일족의 입장에 동조하는 현

파적·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소송 관계자들은 이 소송을 개인 차원이 아닌 민족의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중요재판이 미국에서 진행중인 만큼 한인사회가 직접 나서 미정부를 설득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서명운동, 정치권로비 등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일제의 만행을 입증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리 피셔 변호사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우리는 보다 많은 증거와 증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가 이 같은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징용과 위안부 소송을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피해당사국 비정부단체(NGO) 그룹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각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중에 있다.

〈황성락 기자〉

## 한인 191명 시민권 선서

연방이민국(INS)이 14일 LA스포츠 아레나에서 실시한 올해 마지막 시민권 선서식에서 한인 시민권자들이 선서를 마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선서식에서 한인 191명을 포함 100여개 국가출신 4,334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진천규 기자〉



빈  
도  
로

공  
미  
에  
되  
오  
신  
령  
종  
일  
관  
는  
보  
‘  
중  
러  
속  
다  
주  
이  
동  
했  
‘  
지  
를  
는  
모  
도  
‘  
한  
탄  
기  
일  
발